

생태사회와 불교

리우+20, 생태사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생활과 소비 변화 환경 해결 지름길

리우+20 선언문-우리가 원하는 미래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브라질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이하 리우)에서는 120여개국 정상들과 5만여명에 달하는 민간단체들이 모인 거대규모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를하여 '리우+20 (Rio plus 20)'이다. 1992년 리우에서 있었던 유엔환경회의(통칭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된지 20년이 지나, 당시 결정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한 뒤, 다시 새 목표설정과 의제를 논의하며 실질적인 환경위기의 해결에 모든 국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려는 목적으로 열렸다.

유엔이 주도한 이 회의는 꼭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공동의장국이 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자국 녹색성장의 홍보에만 주력하느라, 정작 글로벌 위기극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리더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홀로 '녹색성장의교'를 추진하면서 국제시민사회의 냉소와 비판 대상이 됐다. 녹색ODA 증액에 대해 야심차게 강조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아무튼 이 3일간 회의에서 합의형성은 실패하고 단지 '합의를 미루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라는 방대한 최종선언문을 발표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1992년 6월 지구환경회의의 열려

환경문제와 관련해 1992년은 대단히 커다란 의미를 갖는 해이다. 브라질 리우에서 6월 3일 부터 14일까지 12일간 세계각국 정상들과 민간단체 활동가 약 7만 여명이 모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지구환경위기 해결을 위해 인류역사상 최대 정상회담이자 초대형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곳에서는 정부대표 중심의 유엔 환경회의(UNCED:일명 Earth Summit)와 각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 '92)가 함께 열렸다. 유엔환경회의는 리우선언, 의제 21(Agenda 21)·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보존협약·산림원칙 등을 채택했고, 지구환경회의는 지구환경·세계민간단체협약 등을 택했다.

여기서 '의제21(Agenda 21)'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는 국제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대규모 지구혁명프로젝트라고 할 정도이다. 의제란 회의주제, 해결해야할 주제, 과제라는 말이다. 따라서 각국가마다 의제를 발표하고, 그에 맞춰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별 의제를 발표하되, 이는 정부, 여성, 청소년, 원주민,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9개의 중심이해그룹이 반드시 모여 대등한 위치에서 격론을

통해 의제를 합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제의 실행기간과 목표를 설정하고, 각 그룹별 행동을 나눠 역할분담을 하는 행동약속 이행계획이다. 이것을 2-3년에 한 번씩 실행 평가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 목표를 조정해 계속 실행하는 것이다. 이 의제21작업은 정부만이 아니라 단체들의 변화를 도모하는 좋은 방식이어서 조계종도 오랜시간의 토론을 통해 2006년에 불교의제21을 발표한 적이 있다.

리우 +20에 주어진 새로운 과제들

리우+20의 주 핵심의제는, 지금과 같은 자원수탈적인 회색경제(Grey Economy)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로 그 중심이 재편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00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리우+20 '우리가...' 선언문 발표

1992년 환경회의, '의제21' 등 채택 '의제 21', 환경단체 변화 도모

을 위해 국제적 행동선언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enium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하면서 이를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립을 결의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동안 경제와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대표한 생산중심의 GDP, GNP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언급됐다. 그래서 녹색 GNP나 부탄 국왕이 주장한 GNH개념 등, 진보를 측정하는 더 많은 수단이 의미있게 수용돼야 함을 공식 언급했다. 그리고 이런 활동 실행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채택키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생산과정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소비양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또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환경문제 해결에는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보다 지역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맹아로서 사회적 포용성과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인정한 것도 중요하다.

리우+20에 대한 비판 쏟아져

과거 10년 전인 2002년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서 열린 '리우+10'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Another World is Possible)'란 기치로 10년을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거기서 언급됐던 문제인



지난 6월 20일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20' 회의(사진 위)와 같은 시기 열린 '리우+20' 민간위원회 회의 모습(사진 아래). '리우+20' 정상회의는 녹색경제의 전환을 논의했지만, 민간위원회는 이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했다.

식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지구라는 자원의 한계에 대한 인식, 지구 수용능력의 한계, 자원 희소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위기에 대한 절박함 없이 체계적인 진단과 원인에 대한 분석도 없었다.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태도를 중심으로한 경제주의만이 강조됐다는 평가이다.

녹색경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녹색을 표방하며 성장을 계속하고 싶다'는 '녹색성장' 문자들의 논의와 구체적인 변별 없이 결국 '경제-사회-환경'을 고루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경제로의 편향'을 의미한다.

자칫 녹색페인트로 위장한 개발주의자(Green Wash) 입장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9개 주요그룹 입장이 끝고루 반영돼야 한다는 리우정신을 무시하고 국가중심의 패러다임이라고 평가 하고 있다. 결국 20년전 리우선언 정신을 계승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상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번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와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빌어 쓰고 있는 생태부채 (Ecological Debt),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인류최대의 핵사고인 후쿠시마원전 문제 등에 대해서 아

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걸로 볼 때 저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없는 최대의 이유라는 것이다.

4대강 홍보에만 열심인 한국정부

이번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공동의장국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재정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 세 장관을 대동해 참여했다. 그러나 우려한 대로 총회연설에서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4대강사업과 자전거길, 녹색일자리 75만개창출 성공사례를 소개했고, 녹색성장이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목표를 구현한 포용적 실천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로 출범시키고, 녹색 ODA를 2020년까지 5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밖에서 한국 NGO들은 4대강 개발의 파괴성과 반환경성, 녹색성장의 허구성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치로 문제의식을 느껴온 서울시장, 광주시장, 수원시장 등 40여 지자체와 약 30여 한국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면서 몇가지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유엔(UN)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

유엔이 국가 이익을 대변하고, 자본을 무기로 한 초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에 움직인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초국적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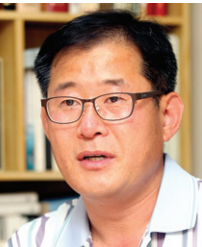
전 지구적 위기 앞두고 거버넌스

모든 단계서 포괄적 참여 보장해야 환경단체 정책 역량 강화 지원필요

서 UN에 상하위를 두자는 말부터, 집행부와 대등하게 지구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UN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지구적 위기를 앞두고 모두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요성 말하고 있다. 협치(協治)라고 번역한다. 통치(統治)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것이라면 협치(協治)는 정책결정의 초기부터 관련 사회단체들과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대등하게 협의해 정책을 결정하고, 그 실행에 함께 책임 지는 것이다. MB정부 들어서 그 많은 거버넌스는 거의 사라졌다. 정치적으로 퇴행을 겪고 있다. 앞으로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야한다. 또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부에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된다.

총체적인 과제 해결에는 총체적 에너지의 결집이 필요하다. 환경위기를 위해서는 곧 정치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조계종의 자정과 개혁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그 흐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정길 (예코불) 전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저작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 상 표 등록 번호 : 40-0863341호
허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 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구단구궁법**

강 의 일 정 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지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통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